

■ 제주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한달

관광객 급감·소비 위축 제주사회 '휘청'

현재까지 도내에서만 4명 확진 판정... 우려 현실화
 17일 동안 발생 '스톱'... 타지역 상황은 아직 엄중
 검사 능력 강화·안심병원 지정 등 "전시체제 유지"

제주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한달(21일)이 됐다. 짧은 기간임에도 관광객이 급감하고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제주 전체가 휘청이고 있다. 지난 4일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7일째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최근 타 지역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한달 새 바뀐 일상을 비롯 4·15 총선의 영향과 지역경제, 교육·문화 등 전반에 걸쳐 찾아본다. >>>관련기사 2·3·4·5·6면

▶ 시작된 우려=제주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는 2월 첫 날부터 시작됐다.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제주를 여행한 중국인 유모(52·여)씨가 본국으로 돌아간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파악하고, 유씨와 밀접하게 접촉한 17명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지 않았으면서,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17명을 '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 자가격리 시켰다. 이후 2월 8일 17명이 별 이상 없이 격리에서 해제되고, 전국적으로도 확진자 발생이 주춤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는 양상을 보였다.

▶ 제주마저도...=코로나19 우려가

점차 사그라들던 지난달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확인된 뒤 대구·경북에서만 하루 수백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대규모 확산'이 진행됐다.

당시 제주도는 무사증 일시 중지, 중국인 유학생 특별관리, 일본발 크루즈선 기항 취소 등 외국발 감염을 막기 위해 열을 올린 터라 내국인 감염자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었다. 결국 2월 21일 휴가자 대구를 다녀온 해군 상병(22)이 제주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2월 22일 두 번째(22·여·호텔 직원), 3월 1일 세 번째(48·여), 3월 4일 네 번째(46)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청정지역

사수에 대한 기대는 사라졌다.

이에 제주도는 확진자 4명 모두 대구에서 제주로 입도한 점을 들어 해당 노선 항공편으로 들어오는 승객과 승무원에 대해 2차례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분리된 동선 및 수하물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토록 했다. 또 14일 이내 대구·경북을 방문한 도민이나 입도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최대 집단감염 사례인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 2명이 잇따라 제주를 방문한 직후 각각 3월 10일, 11일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지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님을 말해줬다. ▶2면에 계속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소비 위축과 관광객 급감 등으로 제주사회가 휘청이고 있다. 대부분 국제선이 멈춰서면서 한산한 19일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대합실 모습.

제주시 2만7000세대에 천연가스 보급

25일부터 배관설치 지역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25일부터 제주시 도시가스배관 설치지역 2만 7000세대에 대해 천연가스(LNG) 보급이 이뤄진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2017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공사비 5035억원을 투입해

기반시설인 생산기지 및 공급배관(81km), 공급관리소 7개소 등을 설치(한국가스공사)했고, LNG 도시가스 공급배관 마을 통과 반대 등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도, (주)제주도시가스사와 협업체제로 도시가스 공급전환을 위해 도시가스 배관시설 점검 및 공급안 내를 실시했다. 고대로기자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단 비상금융조치”

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주제
 50조 규모 비상금융조치 결정



비상금융조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19일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금융조치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비상경제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이날부터 본격 가동됐다.

문 대통령은 “오늘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며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을 12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취급기관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최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원금 만기 연장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탁,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한다. 청와대=부미현기자

“월급 줄 돈 없어”... 고용지원금 신청 급증

18일까지 412건 신청... 2~3월에만 386건 집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월급을 주지 못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도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현황은 412건·4778명에 달한다. 신청 유형은 유급휴직이 378건·4228명으로 대부분이었고, 나머지는 유급휴업이다.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 사업장이 27건·2680명으로 가장 많았고, 11~30인 75건·779명, 31~100인 20건·494명, 5~10인 82건·418명, 5인 미만 208건·407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1일 이전 신청 건수는 4건에 불과했지만, 2월 170건, 3월 들어 18일까지 216건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휴직·휴업)를 하는 경우 180일까지 하루 최대 6만

6000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제주도는 지난 9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업무 처리를 위한 특별TF팀을 구성했다. 통상 신청 사업장은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난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TF팀이 현장 확인에 나서 하루라도 빨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원 대상·규모 확대는 물론 불편사항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9일 지역 특성을 고려해 관광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지난 16일 이 건의를 반영해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송은범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무한한 상상력으로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고 미래를 지향하는
 기술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열정과 도전으로 제주도민들께서
 더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라일보 창간 SINCE 1989
31주년을 축하합니다



世紀建設株式會社